

특집논문

몸과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정치적 상상 그리고 『사상계』

백영경 |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공과 지식의 정치

-1960년대 『사상계』 속의 정치적 상상과 자유주의적
통치의 한계

김태호 | 1950년대 한국 과학기술계의 지형도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

-1960년대 『사상계』 속의 정치적 상상과 자유주의적 통치의 한계-

백영경**

〈차례〉

1. 들어가는 글
2. 인구, 지식의 정치와 자유주의
 - 2.1.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
 - 2.2. 인구, 지식의 정치, 자유주의의 제한
3. 1960년대의 정치적 상상과 『사상계』
 - 3.1.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정치적 상상
 - 3.2. 인구에 대한 당대의 다른 시각들
4. 나오는 글

〈국문초록〉

자유주의적인 정치를 강하게 지향하면서도 자유주의를 제약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상계』 속에서 종종 드러나는 이러한 모순적 입장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순적 입장은 인구가 정치의 영역이 아닌 지식의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에 주목한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자명한 문제로서 인구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당시 어떤 정치적 상상과 인식 속에서 인구를 제한해야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아 갔는지, 거꾸로 인구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은

* 이 논문(저서)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7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인류학/과학기술학 조교수

어떠한 정치적 미래를 기획하는 일이었는지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 논문은 통해서 당시 재생산 영역에서의 자유에 대한 의미는 정치적 의미의 자유와 무관할 수 없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당시 인구정책이 여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성의 몸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주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나, 근대국가의 인구관리란 그 속성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제한하는 일이다. 따라서 인구 담론의 위력은 바로 객관적인 지식의 지위를 통해서 남한이라는 정치적 단위를 공고화하는 것에서부터 빈곤의 원인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내면화하는 일,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의 삶을 만들어 나가며, 동시에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일,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윤리적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있었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인구, 사회적 몸, 국가, 재생산, 지식의 정치, 자유주의적 통치, 젠더

1. 들어가는 글

자유주의적인 정치를 강하게 지향하면서도 자유주의를 제약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상계』 속에서 종종 드러나는 이러한 모순적 입장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사상계』의 본질이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논하기 보다는 인구를 통한 지식의 정치가 어떻게 이러한 모순적 입장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사상계』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남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적인 쟁점들을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사상계』는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근대화담론의 생산에도 적극적이었으며, 인구통제나 산아제한을 주제로 한 글들도 다수 게재되었다(정진아, 2012). 필자들에게 따라서 논조에 차이는 있으나 『사상계』의 입장은 경제개발을

통하여 사회문제와 빈곤을 해결하고, 여성에게 있어서도 가족계획을 통해 자기개발과 현대적 가족생활을 권장하는 것이었다.¹⁾ 그런데 사실 『사상계』는 1960년대의 인구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읽게 되는 텍스트이지만 그러나 『사상계』의 인구담론이 독자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임지연, 2006). 이 논문 역시 『사상계』의 인구담론 그 자체를 탐구하려 하기 보다는, 통일, 빈곤, 가족계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사상계』의 기고문들을 통해서 이 당시의 인구에 관한 논의들이 어떠한 정치적 상상에 기대고 있었으며, 인구라는 새로운 지식 정치의 영역이 열어준 논의의 영역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1960년대의 인구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경우, 경제개발 및 근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젠더 관점을 가진 연구자의 경우에는 가족계획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²⁾ 전자의 경우(양재모, 1986; 권태환, 1997) 1960년대 남한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적정인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구조절이 필요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비판적으로 보거나(이미경, 1989),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 문제로 접근하거나(김은실, 1991), 혹은 한국의 가족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기원으로 보기도 하고(김미현, 1993; 김홍주, 2002), 가족계획의 성공요인으로서 여성들의 행위자성을 강조하는 등(배은경, 2004; 2005)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인구가 정치의 주요 개입 지점으로 등장하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자와 큰 차이가 없다.

1) 좌담, 「가정생활의 현대화」, 『사상계』 82호, 1960.4.

이효재, 「한국가족계획의 현대화안」, 『사상계』 93호, 1961.4.

이효재, 「여성의 사회진출」, 『사상계』 152호, 1965.10.

2) 이러한 연구의 예외로서 인구 및 통치에 대한 관심과 젠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결합시킨 연구로서 조은주, 「인구와 통치: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6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구는 흔히 자명한 개념이나 실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개념이며 정치적 지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온 개념이다(Paik, 2009). 다시 말해 인구는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된 역사적 개념이고(작스, 2010), 19세기 이후 통계학의 발전과 개인보다는 인구를 규제하게 된 통치 기술의 변화에 힘입어 중요하게 등장하면서, 인구는 사회적 몸(social body)을 상상하는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백영경, 2006).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대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서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이진경, 2003; 2010), 실제로 인구란 국가의 개입과 함께 개인들의 협상이 이뤄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한 공동체가 과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며 미래를 기획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Anagnost, 1997).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구정책을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인구 지표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구 문제의 이러한 정치적 성격이 종종 가려지는 것 자체가 인구라는 지식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인구 문제의 근원에는 언제나 특정한 정치적 상상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살펴 본 후에, 『사상계』의 필자들이 각기 다른 정치적 상상에서 따라 인구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보았는지,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구통제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생겨가는 과정은 실제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의 승리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을 『사상계』에 실린 기고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2. 인구, 지식의 정치와 자유주의

2.1.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

19세기 유럽에서 통계학의 발전을 통해 공동체나 민족, 국가 등 집합

적 삶을 인구나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인구는 사회적 몸을 상상하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당시 발전하는 생물학과 사회과학의 담론들은 수사학적으로 질병과 정치적 반대파들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고,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의 융합을 가져왔으며, 개인들과 인구나, 사회와 국가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Horn, 1994; Wagner, 2000). 신체에 대한 지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통치를 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19세기 유럽은 정치적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정치문제를 인구나라는 유기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수사학은 전체를 위하여 인구나 내의 특정 부분을 제거하거나 교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Foucault, 2003). 부랑자나 빈민, 정신병자, 범죄자 등은 사회의 외부로 취급되면서도 동시에 인구나의 일부로서 사회 내에 위치하는 존재였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인구나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인구나관리 자체는 “사회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그 자체로 공과 사, 남과 여, 권리와 의무와 같은 여러 익숙한 구분을 초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Donzelot, 1979).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나가 자유주의 논리를 부정하지 않으며, 종종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유주의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구나가 정치의 영역이 아닌 지식의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근대 사회에서 과학적으로 연구된 자연적 질서는 사회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과학사가 인 셰이핀과 셰퍼가 지적하듯이 “지식의 문제란 결국 사회 질서의 문제”였던 것이다.³⁾ 이러한 점은 1970년대 중반 시작되어 특히 1990년대 이후 빠르게 발전하여 온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3) Steven Shapin & Simon Schaffer, *Leviathan and the Air-Pump: Hobbes, Boyle, and the experimental lif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283.

STS)에서 지적해 온 바이기도 했다.⁴⁾ 과학기술학은 과학적 합리성이나 통계적 지식과 통치의 기술 역시도 사회과학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합리성이나 통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그렇게 구축된 지식의 객관성과 진리성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으로 확장되어 문화적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지를 ‘지식의 정치’라는 이름으로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⁵⁾

2.2. 인구, 지식의 정치, 자유주의의 제한

인구 관리의 두 주요 영역인 전염병 관리와 인구통제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 전체가 위협에 처했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물론 검역과 같은 조치는 근대적인 인구관리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지만, 근대국가는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막고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과학적인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도덕주의적 접근과 사회적 낙인 효과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현대 AIDS를 둘러싼 정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사회적 낙인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제를 강화하기도 하며, 반면 질병 자체가 관리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고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 전체에 대한 위협이 감소되는 순간 사회적 낙인의 정도가

-
- 4) 과학기술학의 주요 저작 가운데 Sheila Jasanoff et al (eds)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Revised Edition. London: Sage, 2001 및 Mario Biagioli (ed) *The Science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1999, 그리고 Jan Golinski, *Making Natural Knowledge: constructivism and the history of science*, with a new Prefac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등이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으로는 브뤼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아우또노미아총서 20, 갈무리, 2009[원제 *Nous n'avons jamais ete modernes: Essai d'anthropologie symetrique* (1991)]가 있다.
- 5) ‘지식의 정치’가 인문학적 성찰에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는 즐고, 『지식의 정치와 새로운 인문학: ‘공공’(公共) 연구의 확장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 160호, 2013년 여름, 412-429쪽 참조.

약화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자리 잡은 공중보건 기구들은 생식보건 및 가족계획의 경우에도 이용되어 인구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전염병 관리나 가족계획을 연결 짓는 고리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위기의식이었다.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가 문제되는 상황은 전염병 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너무 높거나 낮은 출산율이나 모성사망률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여성의 재생산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재생산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맬서스의 논리이다. 맬서스는 『사상계』의 인구 관련 논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론 인구의 증가에 대한 경고로서 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담론에 대한 맬서스의 공헌은 단지 경제에서 인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데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인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지점은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관련하여 개별 신체는 불안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⁶⁾ 사실 인구는 맬서스 이외에도 많은 18세기 사회철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맬서스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애덤 스미스와 데이빗 흄은 사회적 복지에서 인구의 크기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많은 인구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흄은 “모든 현명하고 정당하며 온건한 정부는 그 신민들의 삶의 조건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여 상품과 부 뿐만 아니라 인간들 또한 그 수가 풍부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맬서스가 앞선 인구 논의들과 달랐던 점은 고정된 시점에서 인구와 사회의 복지 사이의 관계를 상정하는 흄 식의 정태적인 인구상과는 달리, 맬서스의 인구상은 동적이라는 점이었다. 튼튼한 신체는 흄에게라면 그

6) Catherine Gallagher, “The Body versus the Social Body in the Works of Thomas Malthus and Henry Mayhew”, In *The Making of the Modern Body: sexuality and society in the nineteenth century*, ed. C. Gallagher and T. Laqueur,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84.

7)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Oxford: Clarendon Press, 1960.

저 현재의 풍요를 상징할 뿐이었으나, 맬서스는 단지 현재의 사회적 조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를 논의에 끌어들였다. 다시 말해, 맬서스는 튼튼한 신체는 현재로서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조건일지 몰라도, 이후 무절제하게 재생산될 경우 사회를 불행과 악으로 이끄는 단초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의 건강한 신체는 맬서스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가 아니며 "재생산"을 통해, 둘로, 넷으로 즉 기하급수적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는 신체이다. 따라서 건강한 신체에서는 언제든지 굶어 죽어가는 신체들로 가득한 무질서한 사회가 튀어나올 수 있다.⁸⁾ 맬서스가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칙적으로는 모든 생명이 귀중한 것이지만, 인간이라는 종 전체의 미래가 일부 개인들의 재생산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맬서스가 그리는 미래는 현재 어떤 징후를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이미 언제나 위협 아래에 놓인 미래이다. 미래에 대한 이런 식의 상상은 그 위협을 구실로 언제나 현재의 재생산에 대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일부 개인들의 재생산을 문제시하게 된다. 이는 왜 인구 담론이 항상 위기론으로 나타나는 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현재의 인구 집단에서 단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그것도 위협에 놓인 미래를 투사함으로써, 인구에 대한 논의는 종종 불안감을 자아내게 되며, 일부 개인들의 존재 혹은 행동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거되어야 할 무엇으로 규정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백영경, 200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구관리를 통해 권리를 제약 받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일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라는 탈정치적인 수사학을 동원함

8) 맬서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대가족의 어머니에게 충분한 양식은 없다. 아이들은 음식이 부족해 아프게 된다. 건강하게 혈색 좋던 식구들은 이제 창백한 얼굴이 되고 눈은 불행으로 켜해진다.” 결국 “건강하게 피어나는 하나의 신체는 두 개의 허약한 신체가 되고, 그것은 언제든지 굶어죽어 가는 신체 넷으로 전화될 순간에 있다”는 것이다.

에도 불구하고, 인구 전체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으며 더구나 인구문제나 인구위기론에서 전체 인구 구성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구 통계를 내고 문제를 찾아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근대국가라면 당연히 하는 일상적 행위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인구 문제는 사실 진단부터 처방과 개입까지,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사안인 것이다. 인구수를 집계하는 가장 단순한 문제에서조차 시민권의 소유자/비소유자, 합법/비합법 체류자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가르게 되며,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여부, 성적 지향, 흡연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상/비정상을 가르게 될 뿐 아니라 출산율, 이혼율, 혼인율, 사망률, 수명, 인구 이동률 등등은 끝없이 정상/비정상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다.

사회적 몸으로서 인구의 문제는 결국 정치적 단위의 문제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으며, 누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누구의 출산은 환영받지 못하는가라는 “재생산의 정치”(the politics of reproduction)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인구 관리의 대상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누구의 출산이 문제인가의 문제가 언제나 제기되는 것이다. 1950-60년대 남한의 인구문제 인식의 경우에도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상정하느냐, 어떤 인구가 어떻게 문제라고 보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인구에 대한 위기의식은 단지 높은 출산율에서 기인하는 문제는 아니었으며, 실제로 많은 기고문들은 출산율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⁹⁾ 빈곤의

9) 저출산에 대한 우려도 단지 낮은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바람직하지 못한 인구는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낮은 출산율에 대한 고민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자체가 감소한다거나 그로 인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 계 이민이 증가하는데 비해서 진짜 유럽인들이 감소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민 정책을 통해 안정된 인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라티노나 흑인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백인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며, 여전히 인구 감소보다는 인구 폭발이 국가의 의제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인도에서조차 무슬림 보다 낮은 힌두들의 출산율을 높이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이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인구를 지구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라고 볼 것인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이 시기 인구문제에 대한 진단은 달라졌고, 자유는 무엇이며 인간다움은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사상계』를 읽으면서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에 주목한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자명한 문제로서 인구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당시 어떤 정치적 상상과 인식 속에서 인구를 제한해야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아 갔는지, 거꾸로 인구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미래를 기획하는 일이었는지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당시 재생산 영역에서의 자유에 대한 의미는 정치적 의미의 자유와 무관할 수 없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당시 인구정책이 여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성의 몸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주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관리란 개인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제한하는 일이라는 앞서의 지적을 상기한다면, 당시 여성 대 국가의 구도를 넘어서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였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1960년대의 정치적 상상과 『사상계』

3.1.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나 정치적 상상

는 방안이 심각하게 논의된다. 저출산 담론의 민족 혹은 국가중심성이나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족이나 국가 혹은 지방자치체와 같은 특정한 단위를 떠나서 출산율 숫자 그 자체로 만든 우리에게 아무런 불안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문제 설정 그 자체가 이미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백영경 2006).

통치의 대상으로서 인구에 대한 관심의 기원은 일제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소현숙, 1999; 조은주, 2012). 이 시기 일본의 관심은 제국을 위한 노동력과 병력을 생산하는데 있었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가족계획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전 이후 일본이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하였고, 1940년대 이래로 국제 인구관련기관들이 모두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도입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권은 각기 다른 이유로 모두 이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이승만은 가족계획에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나이 많은 가부장으로서 경제개발과 인구 사이의 관련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장면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승만은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남북한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통일을 이룬 이후에 할 일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가족계획협회, 1991; 보건사회연구원, 1991).¹⁰⁾

인구비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선거를 통해 통일을 곧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승만 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1960년 4.19 이후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중립국이나 UN 감시 하에 남북총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야당의 주장이기도 하였다. 분단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고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1950-60년대 초반의 시점에서 보면 분단은 불과 10년 여가 지난 사건이었을 뿐이며 한국전쟁의 정전 역시 10년 안쪽의 일이었다. 이러한 통일을 둘러싼 논의들을 『사상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남북 사이의 관계나 통일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는 인구문제에 대한 시각이나 해결방안에도 영향을 끼

10) 원자력의 경우에도, 이승만은 중공업과 자원이 풍부한 이북 지역을 곧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업화의 문제에도 소극적이었다. 그에 비해 원자력과 핵의 경우에는 남북 사이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였다. 정치적 미래에 대한 상상이 다른 정책적 시행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원자력연구원, 2002).

치고 있다.

한국전쟁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1953년 6월에 실린 글은 인구를 인적 자원으로 보는 일제의 관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산아를 장려하고 소질향상에 힘쓰는, 다시 말해 인구의 질과 양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수는 민족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소라 아니할 수 없다. …… 현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구문제 해결의 긴요성은 병원충실을 위한 인구자원의 응급적인 과제가 아니고 금후 이십년 이후, 즉 장래의 우리민족의 운명을 담당할 민족성원의 신장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총력전에 있어서 일반장병뿐만 아니라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서 직접전쟁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할 인원수는…… 일선 장병수의 약 10배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인구자원과 가의 소질에 전쟁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시는 물론 평시부터 인구정책에 유의하여 산아를 장려하고 소질향상에도 힘쓰는 법이다.¹¹⁾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 혹은 총력적이라는 정치적 전망에 입각하여 있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은 1960년대에 들어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인구가 적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을 받아들일 리가 없으며, 높은 실업률이 남한 내부의 불만 세력의 기반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인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남한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선거의 불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독일의 사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에 각각 25대 10의 비율로서 주장했어야 했을 것이다. 항구적인 수적 열세와 투표에 있어서의 패배를 회피하기

11) 변시민, 『인구정책론』, 『사상계』 3호, 1953.6.

위해서 쏘련과 동독괴뢰는 상대방국가에 동수대표를 주장한다. 이것은 다시 합동기관을 영구히 교착케하고 정돈케할 것이다.¹²⁾

민주당 정부가 말하는 「유엔감시하 총선에 의한 남북통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것이 가능할까? …… 만약 공산당도 참가하는 의미에서의 유엔감시하 남북총선이 실시된다고 가정할 적에 보수세력·사민세력이 공산당과 대결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 남한동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북한동포에게는 그것이 없다. 그러나 남한에는 실업자가 152만명을 헤아리고 있는 대신, 북한에서는 노동력의 부족을 고하고 있다. …… 대한민국이 기간산업건설에 박차를 가해 자립경제체제에 급속히 접근치 않는 이상, 한국의 자유주의세력이 공산당과의 힘의 대결에 있어서 조금도 안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¹³⁾

특히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불신은 매우 강한 것이어서, 북한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립국 관리에 의한 총선거를 추진한다는 점은 그 자체로 남한으로 하여금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북한이 추진한 행정구역의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한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흘러가게 되었다.

더욱이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되 남북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대표로 구성하자는 것은 생억지다. 이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구 2천여 만의 대한민국과 날치기식으로 조작된 인구 9백만 미만의 비법적 「인민공화국」 공산집단의 대표를 1대 1로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것이다. …… 소위 민족위원회 구성안에서부터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그들이니 앞으로 남북총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남북의 의원수를 동수로 하자고 고집할 것은 자명한 일

12) K. 퇴빈슈타인, 「독일통일은 가능한가」, 『사상계』 90호, 1961.1.

13) 신상초, 「통일을 갈망하면서」, 『사상계』 90호 1961.1.

이다. …… 아울러 결론을 대신하여 한마디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북한공산당집단은 평화통일의 선전공세를 최대한으로 벌여놓고 있으나 그 실 그들로서는 공산통일에 절대 유리하지 않는 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은 할 생각도 없으며 진정의 노력도 않는다는 것이다.¹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여·야 중요정당들 간에 거의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견해부터 간추려 보면 우선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그 「최대한」적 요청은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 총선거를 통한 남북통일의 실현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옹호하여 민주주의의 승리를 확보하려는 지향의 표현이다. …… 인구비례 원칙으로 말하면 남한인구가 2천7백만임에 비해 북한인구가 천만에 불과하다는 계산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한편 북한 측은 그들의 인구상의 열세를 카버하고자 「지역 대등」 원칙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한 일이다. 원래 「이북 5도」라고 불리워지던 것을 남한과 맞먹도록 1특별시 9도로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도 그러한 타산의 발로였다.¹⁵⁾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도 인구의 수를 중시하는 사고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심지어는 가족계획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경우에도, 국방의 문제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과 비교하여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고를 다음과 같은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보다 소비가 초과된 현실이니 가족계획을 하므로 이 현실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경제적 입장에서는 본 가족계획은 적극적인 태도로 찬성하게 되어있다. …… 오늘 우리 현실은 신문지상으로 항상 보도되어 알지만 북의 우는 사자와 같이 일어난 북괴의 야수 공

14) 한재덕, 「북한이 제기한 통일방안의 문제점」, 『사상계』 93호, 1961.4.

15) 박동운, 「통일정책의 모색-남북통일은 한국문제해결의 열쇠」, 『사상계』 131호, 1964.3.

산침략이 있고, 남에는 의지할 수 없는 교활한 왜놈이 다시 그 국력으로 음양으로 외교선·경제선을 통해서 서서히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서 생존을 보존하려는 이 야비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이 국방문제에서 국민의 수를 함부로 주려 세계적 사조라 하여 그 비현실적이며 비민족적인 이것을 채용할 것인가. 이 가족계획을 채용해서 해결한다면 즉 자살위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국가의 존립이 국방력에 있다고 일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족계획은 완전히 무시해야 할 것이며 중공의 육역 인구, 일본의 일역 인구에 대등할 수는 없으나 생산증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¹⁶⁾

인구의 감소가 취약한 국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대해 반론이 되었던 것은 핵무기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대론이었다. 이제는 인구의 증가나 병력의 규모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며, 원자탄과 수소탄, 혹은 전략적 두뇌와 같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는 논리가 인구의 수에 기반을 두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논리에 맞서게 되었던 것이다.

요사이 전쟁이 난다 해도 원자탄, 수소탄, 전략적 두뇌가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군인의 수효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무조건 양적으로 승리하는 시대는 지났다. …… 대동아를 삼켜버리려는 야심을 갖던 일본이 한 때는 인구를 자꾸 자꾸 늘이는 것이 강국이 되는 장본이라고 생각했으나 세계는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만이 앞으로 유망하다는 것을 깨달아 1950년부터 출생률을 세계 최저율로 떨어뜨릴 만큼 철저한 인구정책을 써서 아시아 걸인 인구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으려고 하는 중이다. …… 난 일본이 좁은 땅에 인구만 양적으로 늘어가는 것보다 우리 이웃나라가 질적으로 인구의 대혁

16) 강주심, 『수태조절의 방법과 입법조치』, 『사상계』 97호, 1961.8.

신을 하고 있는 것이 더욱 두려우며 아직 잠을 깨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일반이 더욱 비참한 것 같다.¹⁷⁾

이렇게 경합하던 두 가지의 논리는 총선거를 통한 전망이 점차 멀어지면서 특히 군사혁명을 계기로 하여 경제발전을 통해서 북한을 이겨야 한다는 인식이 승기를 잡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공업이 발달해 있는 상태였고, 북한에 비해 실업률이 높았던 남한에게는 경제발전이라는 과제가 더 절실한 것이었다. 특히 6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이미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한때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한 일도 있었으나 근년에 와서는 <UN 감시하의 총선거>라는 표어를 마치 무슨 주문을 외듯이 되풀이하고 있다. ……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다. 승공통일이라는 말은 반드시 무력으로의 북진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남한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생활의 수준을 월등하게 높이는 말이다.»¹⁸⁾

특히 남한과 북한이 이미 각각 독립적인 단위로서 분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이전의 중립화론은 그 힘을 잃게 되었고 어차피 각기 독립된 국가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면 자체 역량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통일에 대한 전망은 멀어지는 중이었으며,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군사혁명이후의 일”¹⁹⁾이라는 회고가 가능한 것은 군사혁명을 통해서 단정

17) 고헥경, 「산아제한의 국가적 의의」, 『사상계』, 1960.4.

18) 「통일은 실력배양으로」, 『연세춘추』, 1964.11.23; 캠퍼스동정, 『사상계』 142호, 1965.1.

19) 이만갑, 「한국에서의 가족계획 -인구문제의 합리적 해결은 무엇?」, 『사상계』 139호 1964.10.

의 전망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가족계획이란 당시의 정치 전망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중립화론자들의 주장은 한국이 해방된 1945년의 사태를 다시 찾아 새로운 중립적인 한국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후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립국가로 이룩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해방초기 많은 한국지도자 특히 남한에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된 1948년 5월의 총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인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고방식임에 틀림없다. 남한인사의 상당수가 이 총선이 한반도분할을 영구화한다는 이유 때문에 총선거에서 기권했었다. …… 위의 분석으로 판단해 볼 때 한국의 통일전망에 대해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낙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괴정권은 다 같이 꾸준히 자체영역 안에서의 자급자족을 위한 역량을 길러가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한반도의 분할을 경화시키는 방향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괴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격한 변동은 두 개 한국간의 차이를 더욱 길게 그리고 넓게 만들게 된다.²⁰⁾

남북한이 각기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분단의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남한 정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개발이었고, 농촌의 과잉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도시의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서도 1950년대와 1960대 사이의 인식 변화는 뚜렷했다. 1950년대 농촌이 우수한 인력을 도시에 보급해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다면, 1960년대 경제개발 담론 속에서는 대책 없이 자녀를 낳아 교육도 시키지 못하면서 제 먹을 것은 타고난다는 관념에 빠진 낙후된 존재가 농촌이었다.

20) 이정식, 『한반도의 분할과 통일-기적만을 기다리는 한국의 미래』, 『사상계』 145호, 1965.4.

민족의 문화를 창조발전시키는 주체는 민족성원가운데 특히 우수한 분자들이며 이 우수분자의 노력활동여하는 민족흥망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융성은 타민족과의 접촉교섭을 빈번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민족의 우수성원들이 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환원하면 여하히 우수분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이 사회의 하층에 있어서는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적어도 우수분자들이 자기의 실력 여하에 따라서 사회의 상위자가 되고 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 즉 대도시는 소위 인구의 일류선발에 의한 선량단이며 이 선량단을 구성하고 있는 선량자들은 대대의 도시원주자의 자손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농촌으로부터 우수한 인재들이 도시에 집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도시에 집중한 이러한 선량자의 자손들은 멀지 않은 세대에 자멸할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덕 병마 빈곤 주정중독 높은 사망률 등에 의해서 그리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도시는 농촌의 우수인구를 흡수하여 인구의 신진대사를 취행하여 항상 자기를 개편하는데 변영하고, 또 그에 따라서 민족, 국가가 발전한다고 하였다. …… 그리하여 농가계급만이 본래적으로 독립하여 영속하는 계급이며 타계급으로부터 인구의 보급을 받지 않는 계급이다. …… 인구수를 감소시키는 제인소는 또다시 인구의 질까지 저하시켜 거기에 민족쇠퇴의 길이 열린다. 이상과 같이 이것을 제민족은 가족정신을 견지하여 자손의, 변영을 희구하였기 때문에 인구는 항상 유지되었고, 따라서 멸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술로 미루어본다면 인구수는 민족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소라 아니할 수 없다. …… 현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구문제 해결의 긴요성은 병원충실을 위하는 인구자원의 응급적인 과제가 아니고 금후 이십년 이후, 즉 장래의 우리민족의 운명을 담당한 민족성원의 신장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²¹⁾

21) 변시민, 『인구정책론』, 『사상계』 3호, 1953.6.

농촌을 어떻게 근대화시킬 것인가, 농촌의 과잉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1960년대의 인구에 관한 논의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다.

3.2. 인구에 대한 당대의 다른 시각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도 인구의 수를 중시하는 사고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심지어는 가족계획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경우에도, 국방의 문제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과 비교하여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고를 다음과 같은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업화라는 허울 좋은 정책과 연 5%의 성장률이라는 달팽이 걸음을 전제로 한다면 앞서 말하였던 과잉노동인구를 1960년대에 소화할 수 있는지. 결국 농촌의 과소고용은 그대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실업은 증가일로로 되어 한국경제는 일본이 과거 90년 걸어서 반공반농을 성취한 길을 앞으로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취농인구를 사백만명대로 떨어뜨리는데 신기축이 있고 이에 결부시켜 물적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출산성보다 지연되는 것을 전제로 인구통제를 가져와야 되겠다.²²⁾

인구가 많고 혹은 적다는 것은 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1. 천연자원의 다과 2. 과학 및 기술의 수준 3. 자본축적의 정도에 따라 특정지역 또는 국가의 인구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 후진국에 있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두가지 기본원칙이 관철되어야 하겠다. 그 하나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또 계속적으로 증가공급되고 있는 인적자원을 완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둘째로는 생활수준의 상승을 극력 억제하고

22) 이기준, 『한국의 경제구조와 인구』, 『사상계』 81호, 1960.4.

또 새로운 인구증가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저축, 따라서 자본축적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²³⁾

물론 이후에도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산아제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후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와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은 저출산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상당한 통찰력을 발견하게 되는 글이다.

실상 최근에 갑자기 논위되게 된 산아제한문제는 막대한 실업인구의 문제와 관련되고 있음을 본다. ……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과잉인구를 어떻게 하여 실질 자본축적에 동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2.88%라는 높은 인구증가율은 곧 정부의 과감하고도 도전적인 경제적 계획을 기다리는 경제발전의 요인으로서의 노동력인구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 『후진국에 있어서 빈곤과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들어온다. 그러나 빈곤과 인구문제의 해결이 산아제한입법을 앞세운 것이라면 그것은 곧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기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 단기로는 산아제한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빈곤의 짐을 더는데 푸러스를 가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의의를 지닐 뿐이다. …… 산아제한이 미치는 가장 중대한 영향은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20~30년 후이다. 그것은 분명히 적극적이고도 악마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 한번 인구가 감퇴의 현상을 나타나게 되면 이는 견잡을 수 없이 체감할 것이며 일단 체감추세를 지향하는 인구는 단 몇 십 년의 단기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 그 영향은 좋은 나쁜든 먼 훗날에 이르기까지 파급하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지도 모른다.²⁴⁾

23) 차균희, 『후진국의 인구와 경제성장』, 『사상계』 81호, 1960.4.

24) 이선환, 『산아제한론의 문제점』, 『사상계』 100호, 1961.11.

한편, 인구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의 정치적 미래를 상상하는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이란 무엇이며 발전이란 무엇인지를 상상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인구에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은 모순으로 느껴졌으며, 50년대 인구문제를 동양인들에 대한 서양인들의 두려움으로 보던 논의가 실리기도 했었던 『사상계』의 논조는 주로 저발전되고 서구의 도움에 의해 갑자기 낮아진 사망률로 인해 인구폭발을 일으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세계에 폐를 끼칠 수 있는 염치없는 동양인이라는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하게 되었다.

1인 1표의 원칙을 엄격히 시행하는 UN 속에서도 자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라의 이론과 주장에는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내 식구는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니 남을 믿고 주책없이 식구를 늘리지 말라」. 이처럼 사리가 번듯한 간단한 교훈이 아직 실시되지 않는 동양의 인구는 1년에 2%내지 3%의 속도로 염치없이 늘고 있어서 방금 세계인구의 반 이상이 동양인구로 점령된 것이 앞으로 약 40년 이후이면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3/5이 동양인구로 점령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현재 동서양간의 실력의 불평등이 따라서 인권의 불평등의 차가 더욱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²⁵⁾

인구문제 특히 세계인구의 증가가 심각한 논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이차대전종료후의 특징적인 한 현상이며 또 이 문제가 지금 인구가 팽창이로 걷고 있는 당사국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미미한데 지나지 않거나 고작해야 일부 국한된 극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사태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도리어 출생과 사망이 균형상태도로 들어간지 오래며 인구 증가가 그다지 심각치 않은 나라에 있어 해가 갈수록 문제의 중대성이 넓게 논의되고 그 해결책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25) 고향경, 「외국의 산아제한 실태」, 『사상계』 97호, 1961.8.

할 수 있다. …… 인구의 증가를 세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민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결국 그 증감은 출생과 사망의 상호관계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26)

인구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적인 렌즈였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시선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인도는 인구가 많아서 못 산다거나 유럽이나 미국은 질병과 생식력을 모두 잘 통제하는 데 반해서, 후진국들은 선진국 발전의 혜택만 볼 뿐 본능을 자제하지 못해서 가난하다는 우리에게 낯익은 담론들이 이 시기 부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몸에는 사지가 있고 이목구비가 엄연히 따로 따로 있어서 각기 독립된 것 같으나 발가락에 유리조각이 박히면 아무 고장 없는 다른 부분까지 아파서 전신이 누어 알아야 하고, 귀가 쑤시고 아프면 멀정한 눈이나 손발도 맘대로 활동을 못하고 귀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이것을 가리켜 사람의 몸은 유기체인 까닭이라고 하는데 인간사회도 이와 비슷하여 사회의 일분자인 개인이 고통을 당할 때 사회전체에도 그 영향을 주며 또 그 반면에 사회전체가 곤경에 빠질 때 개인만 오붓하게 잘 살 수가 없다. …… 세계의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 중 하나인 인구문제에 대해서 그 신속한 증가와 거기에 따라 올 머리 아픈 문제를 잠깐 더듬어 보았지만…… 가장 서글픈 사실은 가난에 쪼들리기로 유명한 인도의 인구증가율은 1년에 2%이며 그 비슷한 상태의 나라들 중에서는 연3%의 증가율을 가진 나라도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인구파열이라고 할지 인구폭발이라고 불러야 할지 슬그머니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쓴 웃음을 금할 수 없는 사실은 인구의 폭발은 높은 문화수준을 가지고 인간다운 생을 유지하는 유럽이나 미국사람들보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남의나라 구제를 받아 영양불량

26) 이해영, 『인구 그 격중의 의미』, 『사상계』 73호, 1959.8.

과 병과 문맹 속에서 겨우 연명하는 나라들 사이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구미인종의 비례가 점점 줄고 아시아 인종의 비례가 점점 늘고 해서 그 비례만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더 잘 살게 된다는 법은 없다. …… 또 한가지 웃어넘길 수 없는 사실은 후진국의 사람들이 선진국가의 사람들보다 생식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꼭 같은 생식력을 가졌지만 이전에는 많이 죽어버리던 것을 선진국가에서 약을 수입해서 씌으로써 덜 죽으니까 자꾸 더 늘어나는 것이다.²⁷⁾

그런가 하면 인구통제와 가족계획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를 협상하는 장이기도 하였다. 인구통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근의 인구폭발 현상은 인간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지성의 힘을 통해 인격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생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찾고 있다. 인간은 큰 인류공동체의 일부로서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인구문제는 현대문명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절실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핵무기와 같이 가장 새롭고 또 얘기치 않았던 문제이며 또 그 해결책은 실로 지난한 문제인 것이다. …… 과거의 인간생활은 일반동물의 생활과 같이 자연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 즉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등에 의하여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가 억제되어졌다. 인간의 존재가 멸종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렇다고 급격한 증가도 되지 아니하였다. …… 그 뿐만 아니라 만일 오늘날 어느 지역에서든지 기근, 홍수, 지진, 전염병 등에 침범되기만 하면 전세계가 즉시 긴급구호의 손길을 뻗쳐서 이 지역적 참화에 대처하였다. 요컨대 인간은 종족의 보전을 자연적인 조절에 의하기 보다더 능동적 방법으로 거의 완전무결하게 보전하고 있다. 인간은 인

27) 고헤경, 「산아제한의 국가적 의의」, 『사상계』 81호, 1960.4.

젠 초자연적인 존재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은 오히려 큰 자량이요 영광이기도 하다. 인간이 모든 다른 것들보다 구별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증거는 바로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로서 자연적 진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기에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태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것이 비단 사망률에 대한 극적인 저하를 가능케 하였다는 그것 이상의 또 다른 요소도 있을 것을 예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률의 저하가 가져오는 더 심각한 참상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 인간은 그 동물적 요소로 하여 일종의 동물의 하나이지만 그는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자신의 비인격적 방법이 아닌 가장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 또 그렇게 해야 그 자신의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삶의 차원과 새로운 정신적 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이와 같은 지성에 의한 조절로써만이 인간이 오직 동물이 아닌 영적 존재임을 실증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조직력을 가지고 보다 높은 인간의 존엄과 자기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다.²⁸⁾

산아제한은 인간이 인도적인 인류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며 또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조절과 통제라는 관념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자율과 통제라는 개념이 실패에 대한 낙인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낙태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톨릭 쪽의 주장은 부족한 존재로서의 인간됨, 스스로를 내세우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존재로서의 인간을 주장하는 것이다. 가족계획을 둘러싼 다른 입장 속에서 인간다움의 개념이 부딪히는가 하면 인류라는 개념이 구체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 가정의 부부가 피임에 99번을 성공했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자기

28) 조향록, 『산아제한반대론 반박』, 『사상계』 137호, 1964.8.

들이 바라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된다. 그들이 아이를 바라지 않았고 정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웃들이 자기의 임신을 보고 미련하다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식모도 식구가 많아지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는다. 집이 촉박해진다. 이렇게 거치장스럽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기까지 한 본의 아닌 임신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낙태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한 환경 아래 일본에서는 매일 6천명의 낙태수술이 행해지고 있다.²⁹⁾

낙태의 경우에서 보듯이 인구를 통제하고 생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인구 조절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영적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의미화되는 상황에서는 제약의 의미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결국 인구 담론의 위력은 바로 객관적인 지식의 지위를 통해서 남한이라는 정치적 단위를 공고화하는 것에서부터 빈곤의 원인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내면화하는 일,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의 삶을 만들어 나가며, 동시에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일,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윤리적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있었던 것이다.

4. 나오는 말

인구를 통제하고 산아를 제한한다는 행위는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자유로 다가왔다. 특히 196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여러 가지 피임 약제는 새로운 사회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빈곤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경제개발,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자유로운 남한, 임신과 출산에서 벗어

29) 안토니 지머맨, 「합리적인 가족계획을-조향록 씨의 「산아제한반대론 반박」에 대하여」, 『사상계』 141호, 1964.12.

난 자유로운 성, 자연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난 영적인 인간,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는 현대적인 여성 등은 각각 동일한 내용이 아니었지만 1960년대의 지형 속에서 겹쳐 나타나면서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가 점차 정치가 아닌 객관적 지식의 지위를 얻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가 단위가 되면서 근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자유의 확장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재생산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구 담론의 이러한 모순적 속성은 당시 『여원』 등에 등장하던 전쟁미망인이나 독신여성에 대한 담론들이 출산하지 않는 여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인구 과잉에 대한 문제의식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해 개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에 대한 판단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었고, 출산은 통제되어야만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생산은 그저 사회의 구성원을 충원하는 행위가 아니며, 한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Rapp & Ginsburg, 1995), 1950-60년대 인구에 대한 논의 역시 그 논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단위로부터 가치까지 삶의 다양한 측면을 생산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가족 계획이나 인구정책의 젠더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여성, 국가, 인구 등의 범주들이 모두 추상적이면서도 고정된 개념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고 하겠다. 1950-60년대 인구담론 역시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구성물임인 동시에 인구담론을 통해서 남한이라는 정치적 단위가 공고해지고, 특정한 종류의 정치적 미래가 반복해서 상상되는 장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현(1993), 『한국가족정책에 나타난 국가-가족관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김은실(1991), 『발전논리와 여성의 출산력』, 또 하나의 문화.
- 김홍주(2002), 『한국 사회의 근대화 기획과 가족정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5권 1호, 51-82쪽.
- 권태환(1997),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 과제』, 통계청.
- 대한가족계획협회(1991), 『가협 30년사』, 대한가족계획협회.
- 배은경(2004),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배은경(2005), 『가족계획사업과 여성의 몸: 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사회와 역사』 제67집, 260-299쪽.
- 백영경(2006), 『미래를 위협하는 현재: 시간성을 통해본 재생산의 정치학』, 『여/성이론』14호, 36-55쪽.
- 볼프강 작스 등 저, 이희재 역(2010), 『반자본 발전사전: 자본주의의 세계화 흐름을 뒤집는 19가지 개념』, 아카이브
- 소현숙(1999),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의 출산 통제 담론의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양재모(1986), 『우리 나라 인구 정책의 종합 분석』, 『한국인구학회지』 제9권 1호, 11-13쪽.
- 이미경(1989), 『한국농촌여성의 피임결정 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진경(2003), 『한국 ‘가족계획사업’의 생체정치학』, 『문화/과학』 통권 제33호, 181-206쪽.
- 이진경(2010), 『역사의 공간』, 휴머니스트.
- 임지연(2006), 『매체와 여성 문학, 여성 문화: 1960년대 초반 잡지에 나타난 여성/청춘 표상-『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연구』

16호, 211-240 쪽.

정진아(2012),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상계연구팀 편,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조은주(2012), 『인구, 국가, 개인: 한국 가족계획 사업과 통치의 양상』, 연
세대 박사학위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인구정책 3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2002), 『원자력 50년 부흥 50년』, 한국원자력연구원.

Anagnost, A.(1997), *National Past-Times: Narrative, representation, and
power in modern Chin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Donzelot, J.(1979), *The Policing of Families*, New York: Pantheon Books.

Foucault, M.(2003), *Abnormal: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4-75*. New York: Picador.

Ginsburg, F. & Rapp, R. eds.(1995), *Conceiving the New Order: The global
politics of reproduction*, Berkeley, CA: California University Press.

Horn, D.(1994), *Social Bodies: Science, reproduction and Italian
modern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ik, Y.-G.(2009), *Technologies of "the Korean Family": Population
crisis and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contemporary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Rapp, R. & F. Ginsburg, F.(1995), *Conceiving the New World Order: the
Global politics of reproduc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agner, P.(2000), "An Entirely New Objects of Consciousness, of
Volition, of Thought: the Coming into Being and (Almost)
Passing Away of Society As a Scientific Object", in Daston, L.
ed. *Biographies of Scientific Objects*, pp.132-15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Population as a Social Body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Political Imaginations of *Sasanggye* in the 1960s and the Limits of Liberal Governance-

Young-Gyung Paik

Sasanggye often revealed a contradictory position of simultaneously pursuing the liberalist political orientation and the necessity to limit the liberalism. This paper intends to delineate the ways the politics of knowledge in the discourse and practices of population made this seemingly contradictory position possible. The idea of population as a social body was often based on liberalism, but was still able to limit the liberal rights without overtly denying them. Population has been understood as a matter of knowledge, not a subject of political concern. Yet, rather than being an object and stable entity or a politically neutral notion, the concept of population has drawn on a genealogy of concepts with political plentitude, and has changed over time.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analyse what kind of political imagination was behind the practices of population control in the 1960s.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e South Korean state's management of population crises was not merely as the administration of a demographic problem, but also as a specific way in which the state constructs reality and induces public interventions based on a specific imaginary of the political future. The family planning program was intended to reduce not just the number of childbirths in South Korea, but to limit and eradicate communism in the country. In this sense, the

reproductive technologies introduced in this period were essential not only in the family planning program but in the ideological building of the cold war regime of Park Chung Hee as such.

Key words: Population, Social Body, State, Reproduction, Politics of Knowledge, Liberal Governance, Gender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